

정세균 의장 “국민헌법 시대 열어야”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최 “개헌 핵심은 분권... 진정한 3권 분립·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에서 “국민헌법 시대를 열겠다”며 개헌 의지를 다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내년 제헌 7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헌 이래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그중 사사오입 개헌과 유신개헌처럼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며 “4·19 혁명으로 촉발된 3차 개헌과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9차 개헌 또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헌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 7월 국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5.4%, 전문가 88.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이런 압도적 찬성여론은 개헌 추진의 큰 동력이 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 의지를 누차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을 잘 배분해 진정한 의미의 3권 분립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대결적 정치문화를 바꿀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국회 본령은 민생입법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모두 86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1445건만 처리됐고 처리안건의 5배에 달하는 7102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계류법안을 다 처리하겠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다는 각으로 임해 달라”며 “특히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선 공동공약 입법화는 반드시 실현해 정치권의 좋은 관례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생산적인 국정감사와 법정시한 내 예산안 합의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협치의 기본 정신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2012년 협치의 제도화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다”며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토대가 됐지만 지난 5년간의 경험 속에서 성찰의 목소리

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는 안전조절제도,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의 부실을 초래해 온 예산안 자동부제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정 부여당과 국회의장의 담합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일도 정치적 교착상태를 풀어갈 리더십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체제를 상정하고 설계된 선진화법이 다당체제의 정치적 역동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 달라”고 국

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 북핵 도발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언급, “최소한 안보와 평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의장으로서 금년 내 주변 4강 외교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하는 6차 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 테이블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법과 제도 정비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뉴스

민주 정발위, 국민·당원 영향력 확대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일 전당대회를 비롯한 기존 당내 대의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대폭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3시간30분여에 걸친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전당대회나 (공직후보자 선출에서)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지역위원회에 당원이 참여할 구조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당원권리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공직후보자 선출시 권리당원은 50% 이하, 일반 국민은 50% 이상을 반영하도록 한 당헌에 대해서도 “아직 거기까지 논의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 지난 최고위원회 합의에 따라 공천 비율을 바꾸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대표표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발위는 또 당원이 참여하는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 정책생산 과정에 당원 참여, 교육연수 기능 개선,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 인재영입 및 양성 프로그램 구축, 여성과 청년이 참여하도록 하는 당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발위는 다음 주부터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발위는 신하에 정당 현대화·정당문화·구조 개혁 3개 분과와 국민제안센터를 두기로 했다. /뉴스

민주당, 지선 체비... 선출직 공직자 평가춌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1일 지방선거에 대비할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평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설치된다. 평가위에서 민주당 소속 현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기확안에서 (최고위에) 제안한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선거기확안은 지난달 30일 회의 열고 최고위에 중앙당·시도당 평가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평가위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시도당 평가위는 자치구의 시·군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평가한다. /뉴스

文대통령, 동방경제포럼서 러·일·몽 정상회담

6일 한러·한몽골 정상회담... 아베 신조 총리와와의 현지 정상회담은 아직 미정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국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현지에서 논의될 경제협력 방안과 대북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주빈으로 참석하며 대통령 취임 후 첫 러시아 방문이라고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주요 협정·양해각서 서명식 등의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극동 개발을 포함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및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동북아 신경제협력을 구성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러시아 특사였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할트마진 바트볼가 몽골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국·몽골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몽골의 관계 증진 방안 및 북한 핵·미사일 문

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 추진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와의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일에는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 한·러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고려인 동포들, 러시아 인사들을 초청해 대통령 주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개최되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신북방정책,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증진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뉴스

靑 “이유정 후보자 사퇴 존중... 의혹 인정 아냐”

청와대는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인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사퇴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의혹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다. 구분을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 기준을 보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의혹 제기 대상이 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정신이 매우 약해지고 괴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교에 행복은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